

보이스피싱 당한 뒤부터 ‘진짜 고통’ 시작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짜 고통은 전화가 끊어진 뒤부터 시작된다.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에게 통장 지급정지, 수사 절차, 금융기관과의 책임 공방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피해 회복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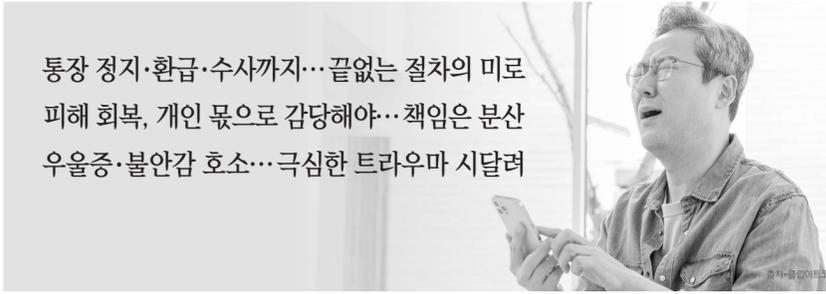
실제로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달 초 직원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약 35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보성군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해 명함과 연락처를 보내며 접근했다.

“지역 사업체라 이윤을 보장하겠다”, “급하게 자제가 필요한데 대신 결제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A씨는 즉응 정당한 거래로 판단했다.

그러나 결제 직후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보성군에 직접 확인했고, 그런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사기라는 걸 인지한 뒤 15분 만에 112에 신고했다”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112 상황실을 통해 금융기관과 3차 통화까지 연결됐지만, 은행 측의 답변은 단호했다. ‘물품 대금 거래’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해 말했으면 지급정지가 가능했을 텐데, 물품 대금이라는 명목이 붙는 순간 벽에 막혀버린다”며 “사기범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장 정지·환급·수사까지... 끝없는 절차의 미로 피해 회복, 개인 몫으로 감당해야... 책임은 분산 우울증·불안감 호소... 극심한 트라우마 시달려

광주지역 수사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이 3000만원대를 웃돈다”며 “광주 역시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범죄 인지 직후 이뤄지는 ‘초동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공백이다. 현행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등 명백한 사기 범죄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속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금융 범죄 특성상 자금은 수분 내 다른 계좌로 이동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했다더라도, 지급정지가 지연되는

순간 피해는 사실상 확정된다. A씨는 “허위 신고가 우려된다면 사후 처벌로 해결하면 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죄 계좌의 처리 경과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조직은 대부분 ‘대포통장’을 활용해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현금화한다. 최초 수취 계좌가 동결되더라도 이미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정지는 추가 피해를 차단 조치일 뿐,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행사 절차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배당되지만, 수사는 대부분 장기화된다.

조직적 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서 검거되더라도 ‘현금 수거책’이나 ‘계좌 모집책’에 그치는 경우

가 많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돈을 빼앗은 주범’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광주의 한 자영업자 B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도 많고 조직이 크다’는 말만 들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가고, 그 사이 사업은 이미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운영자금에 막혀 거래처 신뢰까지 흔들렸다고 했다.

민사소송은 또 다른 선택지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 수익이 남아 있는 계좌를 특정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광주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중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현행 법·제도상 은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이 이뤄진 경우’ 책임을 지

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체했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금융사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범죄 계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피해자 지원 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지지만,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또 지급정지된 금액 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전체의 일부다. 피해자들은 “제도는 있지만, 나오는 상환액은 이야기”라고 말한다.

정신적 고통도 크다. 피해자 다수는 자책과 수치심에 시달린다. “속았을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은퇴자나 소상공인들은 피해 이후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폭력 피해자는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가, 살인 등 형사사건처리절차를 거친 범죄피해자는 ‘스마일센터’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이기에 대상 제외된다.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유일한 지원정책이다.

광주지역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 피해자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은 범죄 피해

자”라며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주목하지 못한 개인의 실수’ 정도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지만, 피해 회복은 개인의 대응 능력과 운에 좌우된다. 통장 지급정지부터 수사 협조, 금융기관 대응, 법적 절차까지 피해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경찰 내부에서도 한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느냐’고 묻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는 답을 주기 어렵다”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전 차단’이 이미 실패한 이후다. 피해가 발생한 순간, 국가와 제도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보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피해자를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이후의 대응 체계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 없이는, 범죄는 반복되고 상처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사건 종료’가 아닌 ‘고통의 시작’에 가깝다.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의 모든 절차마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오늘도 또 다른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오월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

5·18민주화운동 46주기 민간 주도 행사를 주관할 ‘제46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19면

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송고한 5·18 정신을 되새기며 거저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시민단체 소속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민주의 문 앞에서의 민중의례, 인사말, 출범선언문 낭독과 추모탑 앞에서의 분향·헌화, 5·18구묘역 분향·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위원장인 행사위위원장은 “5·18민주항쟁은 과거의 시간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며 “그날의 투쟁은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 펼쳐진 수많은 민주주의 투쟁의 밑거름이 됐고, 마침내 오늘의 빛으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 100여명 분향·헌화 참여 세대 확장 등 목표... “오월정신 헌법수룩” 한목소리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5·18정신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한 시민들이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연대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뤘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오월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민주·인권·평화·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 삶 속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체험 중심 5·18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학생동아

리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교실과 일상에서 살아 숨 쉬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출범선언문은 류봉수 공동행사위원장과 김현 광주시 청소년의회 의장, 조민혁 조선대 총학생회장이 공동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1980년 광주 공동체가 불의에 저항하며 투쟁한 기억이 2024년 내란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됐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대와 계층을 나누지 않고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행사를 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모탑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 정두진 5·18부상자회 조직국장이 분향과 헌화했다.

2묘역에서는 운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김나영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회 의장이 대표로 나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백남수 광주전남추모연대 대표가 헌화를 했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양관식 전남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은 “5·18 정신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이며 미래 세대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등불이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공동 행동과 연대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후임병 200명 ‘균복비·점심값’ 사기 친 20대 도박 채무자금 확보 목적... 공문서 변조도

도박 빚을 탕감하고자 군부대에서 후임병 200명으로부터 ‘균복비·점심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행사처벌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재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공군으로 군생활을 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을 속여 속여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관에서 후임병 62명에게 “현금 3만원을 주면 군복 구입 마일리지 15만포인트로 바꿔주겠다”면서 300여만원

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 “자대배치 배속 도중 점심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6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2017년 7월 18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5078차례에 걸쳐 7억2542여만원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왔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교육청 ‘적극행정 과제’ 시민이 정한다 11일까지 온라인 국민심사로 2개 사업 확정... 맞춤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적극행정의 방향을 시민 손으로 정한다. 시교육청은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국민심사를 실시해 ‘2026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민이 제감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사는 네 가지 사업이 후보로 올랐다. 첫째, 학부모와 시민이 교육 정보와 연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광주 학부모와’ 구축 사업이다. 둘째,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빛고를 스타트업 플랫폼’ 운영 방안이

다. 셋째,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플러스(+ 프로젝트)’다. 넷째,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창의성 향상을 지원하는 ‘건강 UP! 창의력 UP! 즐거운 운동장 만들기’ 사업이다.

참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소통24’에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정책 성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의 목소리가 곧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가 광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joinsu@